

살포자 적발해도 경범죄 ... 업주 색출 손도 못대

불법 음란전단지 단속 하나마나

경찰·구청 전담팀 구성 발본색원 해야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 전단지와의 전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살포 의뢰자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구조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 전단지에 대한 전담반 신설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불법 전단지 살포는 쉽사리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부터 광주시청과 서구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불법 전단지 수거작업을 벌였다.

시는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상무지구 4곳에서 이를 동안 불법 전단지 1만4000여장과 불법 현수막 195개를 수거하며 전단지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또 상무지구의 경우 시의 전단지 수거작업 이후 불법 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시의 이번 정비작업이 일회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불법 전단지에 대한 단속 관행이나 처벌 수위로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전단지 살포를 근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불법 전단지 배포자는 청

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벌금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또 구청 역시 21장 이상 살포자에 대해 전단지의 내용에 따라 장당 2만 500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체 단속이 아닌 경찰의 단속 통보를 토대로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현재 서구청의 경우 공무원 6명이 상무지구 전체에 대한 불법 광고물 단속을 맡고 있다. 그러나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전단지와 현수막 등의 살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불법 전단지에 대한 전담 단속반 신설 등을 통해 전단지 살

포자는 물론, 전단지 배포를 의뢰한 업주나 광고물 제작자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는 업주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자칫 전단지에 대한 정비작업이 ‘전단지 청소작업’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과 구청 등은 업주들의 ‘대포폰’ 사용 등을 이유로 불법 전단지의 제작자 검거 및 처벌에 대한 한계를 호소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살포를 필요로 하는 업주들을 색출하지 않고서는 전단지 근절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구청과 경찰이 단속 전담팀 구성을 통해 단순한 전단지 ‘살포자’가 아닌, 전단지의 근원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남대병원 노조 파업 전야

전남대병원 노·사가 지난 5월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주요 현안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14일 오후 노조가 병원 1층에서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야경사업’ 여수시 전 국장 구속기소

수억대 ‘뒷돈’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4일 ‘여수시 야간경관조성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여수시 김모(여·59) 전 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12월말 조영업체 나이토피아 대표 남모(51)씨로부터 ‘여수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비와 공사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총 3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또 오현섭 전 여수시장과 공모해 지난해 4~5월 나이토피아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김 전 국장이 체포되고, 자신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방향이 좁혀오자 지난달 21일 연가를 낸 뒤 잠적했으며, 경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 전 시장을 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원산지표시 위반 523곳 적발

전남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523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지원은 올 상반기 광주·전남 사망이 줄어오자 지난달 21일 연가를 낸 뒤 잠적했으며, 경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 전 시장을 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7456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업소별로는 식품접객업소가 302개소(57.7%), 농축산물판매업소 221개소(42.3%)로 나타났다. 품목별 위반건수는 돼지고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91건), 닭고기(31건) 순이었다. 광주의 한 식당은 수입산 닭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목포의 한 식당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 1588-811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교육감 겁주나

교육장 일괄사표 받고 5명 만 교체
기자들에게 “터뜨릴 폭탄 또 있다”

‘일괄 보직사퇴서 파동’을 겪었던 전남도교육청의 교육장 교체 인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모제를 통해 5명 정도가 바뀌는 등 소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교육장 인사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괄 보직사퇴서 파동’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군기잡기식 감축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만채 교육감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8월말 정년 교육장을 제외한 3명 정도를 교체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말 정년 퇴임 교육장이 목포와 무안 등 2곳이고, 22개 시·군 교육장 가운데 3년 임기 중 2년 6개월 이상 역임한 교육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교체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교체폭이 크면 납득할 만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서 “교육장은 각계 사회단체, 직능 등 다양한 계층으로 심사단을 구성하는 등 공모제를 통해 선정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직속기관장도 2곳만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8월 말 정년인 2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장 교육감은 지난 7일 도내 22개 교육장과 산하 직속기관장 4곳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 인사폭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됐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또 “폭탄 하나를 더 터뜨릴 수도 있다.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발언,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청 간부들 봉투 전달 폭로’와 ‘일괄 보직사퇴서 요구’ 등 과격적 행보로 교과부 감사와 한국교총의 비난 성명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번 ‘폭탄’ 발언도 이러한 사건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전남도교육청 안팎에서는 “또 무슨 일로 교육청을 시끄럽게 만들지 우려된다. 수장답게 자중하길 바란다”는 반응과, “기존의 틀을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일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으로 엇갈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족구병 첫 사망

올들어 국내에서 수족구병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 뇌염, 폐출혈로 사망한 수도권의 생후 11개월 남아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최근 동아시아지역에서 유행중인 수족구병 원인 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71형(EV71형)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아는 지난 9일부터 열과 두통 증상을 보였었다. /연합뉴스

무진로 추락 40대 중태

지난 13일 밤 8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무진로에서 강모(48·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씨가 5m 아래 농로로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길을 지나던 운전자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절 지어줄게” 2억 갈취한 가짜 승려

○광주동부경찰은 14일 ‘절을 대신 지어주겠다’고 속여 여승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가짜 승려 한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7년 9월 광주 모 사찰의 여승 박모(55)씨에게 접근해 ‘박씨의 땅에 개인 소유의 절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2억6150만원을 가로챈 혐의. ○한씨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난 2008년 8월께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했으며, 지난 11일 춘천에서 검거.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아파트 8층서 딸 던진 30대 주부에 실형

광주지법 1년6월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15개월된 딸을 아파트 8층에서 내던지고 자살소동을 벌인 30대 주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4일 2살배기 딸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설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양극성 정감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아기 아버지의 자살 등에 따른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하더

라도 아파트에서 딸을 던져 중상을 입힌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설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8층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과 사이에 태어난 딸을 포대기로 덮어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의 딸은 당시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해진 화단으로 떨어져 생명을 건졌으나,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설씨는 당시 딸을 내던진 뒤 1시간 가량 자살소동을 벌였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관보됩니다. ● 가격이 합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3) 227-9940
충청점 (063)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82-9200
익산점 (063) 851-2422